

윤석열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10만호 추가공급”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공약
“살고 싶은 지역에 충분한 주택 공급
특별법 제정으로 용적률 상향
이주민 전용단지 조성으로
급격한 집값상승 억제할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으로 기존보다 주택을 10만 호 더 공급하고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고 6일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신도시 재정비’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고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과 수도권 표심 공약에 나섰다.

윤 후보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이 살고 싶은 지역에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부동산 정책의 기본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의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핵심은 신도시 10만호의 추가 공급을 위해 특별법 제정으로 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이다. 또,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이주민 이사 수요를 조절하는 동시에 집값 상승 요인을 억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지난 1989년 노태우 정부 시절 서울의 인구 분산을 위해 경기도 분당(9만 7580호)·일산(6만 9000호)·중동(4만 1422호)·평촌(4만 2047호)·산본(4만 2500호)에 조성돼,

1990년대 초반 입주가 시작됐다.

1기 신도시에 지어진 공동주택만 약 28만1000가구로 오는 2026년까지 대부분의 주택이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다. 아울러 1기 신도시 주택이 노후화가 심해지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주차·상하수도 부식·층간 소음 문제 등으로 재정비 사업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진 상황

이다.

그러나 1기 신도시 용적률이 대부분 높아, 추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선 용적률 상향이 필수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기 신도시의 지자체장들도 지난해 12월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업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정부 및 정치권에 촉구한 바 있다.

윤 후보 측은 일산과 분당에 법정 상한 용적률(300%)을 적용하면 두 신도시에서만 10만 호 이상의 공급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 측은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이사 수요로 인한 수도권 집값의 급격한 상승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주 전용단지를 조성해 이사 수요를 조절할 계획이다.

정책 설계를 맡은 이한주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지금

까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 이주민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해 주변 부동산 가격을 상당히 올린 부분이 있다”며 “이주 전용단지를 조성해 순차적으로 이주를 진행하고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을 때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처럼 분양이나 임대료를 활용해 출렁이는 가격을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 측에 따르면 이주 전용단지는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자와 입주 희망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택지 공급 순위 자체를 늦춘 후 순위 부지와 임대주택부지, 미분양 토지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광역교통망 확충에 대해 “용적률을 올렸을 경우, 광역교통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로 접근하고 있으나, 미래도시와 획기적인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을 후속 공약으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일자리 창출 등 6대 핵심사업에 100조 투입

홍남기 부총리,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6.5조 소상공인 지원 신속집행
에너지 분야 등 공공기관에 67조

정부가 올해 일자리 창출과 한국판 뉴딜 등 6대 핵심사업에 100조원 넘는 재정을 투입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약 40조원 규모의 신규 자금도 공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2022년 재정 조기 집행 계획’ 및 ‘주요 공공기관 투자계획’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민생경제 회복 및 선도형 경제 구축 지원과 직결되는 100조원을 상회하는 6대 핵심사업군 사업을 선정해 집행 속도를 각별히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6개 핵심사업으로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한국판 뉴딜 ▲탄소 중립 재정투자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 등이 꼽혔다.

우선, 정부는 총 6조5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를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도 설 연휴 전

에 대부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또,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약 40조원 규모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전통시장 상인 대상 1000만원 범위 내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도 추진한다”며 “명절 전 영세사업자·중소기업 등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도 조기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투자도 에너지, SOC 분야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대비 2조3000억원 많은 67조원, 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 등 한국판 뉴딜, 3기 신도시 건설 등 주거 안정, 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난·재해 대비 등 안전강화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유도하겠다”며 “이중 상반기 투자집행률도 53% 이상 집

행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의 역할을 강화해 빠르고 강한 경기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도록 연초부터 조기 집행에 전력할 것”이라며 “중앙재정은 집행관리 대상사업(약 200조원)의 63%를 상반기에 집행토록 하고, 지자체 및 지방 교육재정도 상반기 60% 이상씩 조기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올해 정책금융 유동성 공급 및 관리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2022년 전체 정책금융은 전년과 유사한 495조원을 공급할 방침”이라며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전용 금융 프로그램을 전년 302조원에서 약 9조원 늘린 311조원 수준으로 보강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온·오프라인 맞춤형 개인쇼핑몰 창업

창업비용 99만원

나만의 맞춤형
개인 쇼핑몰 제공 평생 수익 창출

200여개 흥삼제품
+3만여개 인기상품
+자체상품 등록 판매가능

25년 역사 브레인 TV 방송국 소유 핫터그룹

대한흥삼주식회사/㈜핫터라이프 T.010-4480-0045

“공정거래법, 이중·삼중 처벌… 대기업 율매”

» 1면 ‘대기업, 공정거래법’서 계속

LG그룹도 지난달 계열사인 S&I건설의 지분과 건물관리 부문인 FM사업부 지분 일부를 처분했다. 그간 논란이 됐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해소하고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국내 대기업 외에도 700여곳의 기업들이 규제에 맞춘 체질개선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전체 규제대상 기업 수는 현재 265곳에서 709곳까지 늘어날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문제는 기업들이 규제에 맞추기 위해 무리한 변화를 추진할 경우 기업 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정거래법은 대기업 집단의 율매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이중, 삼중의 처벌이 적용되는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내용은 다시한번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정몽구 명예회장과

정의선 회장이 현대글로벌비스 지분 매각을 통해 확보한 현금을 지배구조 개편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정몽구·정의선 부자는 이번 달로 6000억원이 넘는 현금을 손에 쥐게 되며,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엔지니어링을 통해서도 최대 5000억원의 현금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돼 1조원이 넘는 자금을 확보하게 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12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공모가는 공모가 5만7900원~7만5700원으로, 현대엔지니어링 지분 11.72%를 보유한 정의선 회장은 상장 과정에서 공모를 통해 534만주 가량을 처분하며 최대 4000억원, 정몽구 회장은 142만주를 매각해 최대 1000억원의 현금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선 회장은 2018년 현대차의 최대주주(21.43%)인 현대모비스를 분리해 현대글로벌비스와 합병하는 방식의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했지만 행동주의펀드 앨리엇 파트너스의 공격을 받아 이를 포기했다. /양성운 기자 ysw@